



한국 대학의 재정 취약성과 재원 확충 방안

김기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지원부장

I. 한국의 대학 — '값싼 대량 교육'

오늘날 국가경쟁력 향상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한 사회의 총체적 역량의 결집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교육의 질 향상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의 경쟁력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한국의 교육 경쟁력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보도를 접하게 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1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조사 대상 49개국 가운데 28위이며 교육 경쟁력은 32위였다.

그 동안 한국의 교육에 대한 특수한 수요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왔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국가간의 경쟁과 한국의 인구 구조상의 변화는 이제 대학도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고,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대학은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놓고 국제화, 특성화를 지향하면서 몇 년 후에 '세계 몇 위권 대학 진입'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 자신도 의심할 정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불만족스러운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학 재정의 취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다. 재정의 취약은 바로 교수와 시설과 설비 등 교육 여건의 미비로 이어지고, 이는 내실 있는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과거 몇십 년 전의 교육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실한 교육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 예를 교원 당 학생 수에서도 볼 수 있는데, 교원 당 학생 수는 개별화된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대학에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스웨덴 9.0인, 일본 11.8인, 미국 14.6인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7.6인을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치 14.8인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로서 한국의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수의 수가 국제적 수준과는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교수 수의 부족은 바로 한 강좌 당 학생 수를 늘리게 되고, 이것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교수 1인의 일방적 강연과 학생들이 받아 적고 시험 때 외워서 답안을 작성하는 일방통행식 교육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한다. 또한 교수들의 강의 부담과 학생 지도 등 기타 업무를 늘림으로써 강의 준비와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게 된다. 교육 여건의 미비는 학생 1인당 교육비에

〈표 1〉 1998년 교원 당 학생 수의 국제 비교

(단위 : 명)

	한국	캐나다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노르웨이	OECD 평균
초 등	31.0	21.0	21.6	21.4	13.4	22.0	16.5	12.6	18.0
중 등	22.8	22.1	15.5	15.7	15.3	16.7	15.9	-	15.8
고 등	27.6	-	12.4	11.8	9.0	17.7	14.6	13.0	14.8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0 대학교육 발전지표』, p. 55.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0*, table B7.1.

서도 나타난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상은 우리 교육을 '값싼 대량 교육'으로 특징 지을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 우리나라의 어떤 단과 대학 전체의 연구 기자재가 미국의 특정 사립대학 한 학과의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어이없어 하고 있다.¹⁾ 25년 전 국민학교와 오늘날 초등학교를 비교해 볼 때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가 늘었다는 것 이외에 교육 방식 즉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가르치고 배우는 양식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같은 교육 환경은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간의 경쟁 극복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의 대학은 대학 발전을 위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계획을 충족시켜 줄 재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대학 재정의 취약성이 한국의 대학 발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재원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공립과 사립대학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입원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정부 보조금, 기부금, 법인 전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은 같다. 그러나 우리의 특수한 교육 환경으로 학생들이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간여하려 하기 때문에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또한 정부 보조도 아주 제한된 범위에 그치고 있으며 거기다 기여 문화의 미성숙은 대학에 대한 기부금 규모가 얼마 되지 않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립대학의 경우 법인이 수익용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재원을 이것으로부터 충당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정부 보조의 확대를 위한 원천으로서의 세금을 더 부담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식으로는 한국의 대학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재정 압박에 직면한 대학이 시대에 앞서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바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학의 재정이 대학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예로 우리나라의 몇몇 대학 중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풍부한 재정으로

1) 조선일보, 1996년 4월 21일자 31면.

〈표 2〉 GDP 대비 정부 교육 예산 지출

(단위 : %)

	한국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전체	고등교육	전체	고등교육	전체	고등교육	전체	고등교육	전체	고등교육	전체	고등교육	전체	고등교육	전체	고등교육
1999	4.4	0.5	6.3	1.7	6.5	1.1	5.8	1.0	4.5	1.0	3.6	0.5	5.2	1.4	5.4	1.2
1990	-	-	6.4	-	6.4	-	5.6	-	-	-	4.7	-	-	-	5.7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0*, Table B1.1a, Table B1.1c.

〈표 3〉 학생 1인당 교육비—고등교육

(단위 : 달러)

	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미국	OECD 평균
1997	6,844	14,809	7,177	9,466	10,157	10,108	17,466	8,612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0*, Table B4.1..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8), 「사립대학진흥법 제정 및 조세감면을 통한 사립대학 재정 확충방안 연구」, p. 14에서 재구성

로 대학 발전을 도모하여 빠른 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질적 성장을 올리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II. 대학 재정의 취약성

현 정부는 한국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면서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성을 인식하고 출범과 더불어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서 교육 재정을 GDP의 5%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내용이다.

핀란드와 덴마크 등 소위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는 교육을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높은 교육비를 정부가 지출하고 있고 이들의 조세부담률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정부와 개인이 각각 교육비를 지출하고, 이들 국가의 조세 부담률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²⁾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프랑스 등은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이 5%를 웃돌고 있고 북구의 핀란드 등은 6%를 초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90년에 4.7%였던 것이 '99년에 3.6%로 낮아졌다. 결국 한국이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교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고 등록금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열악한 교육 환경을 초래하게 되며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 규모의 절대적인 부족 상태 하에서 질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교육비 지출과는 별도로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열악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GDP의 1% 이상을 고등교육을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데 반

2) OECD(1998), *OECD Tax Statistics*,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하여 한국은 0.5%를 지출함으로써 전체 교육비 지출에서의 차이보다 고등교육비 지출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교육 재정에 대한 국제 비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심각한 교육 문제는 빈약한 교육 재정임을 알 수 있다. 절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 재정의 취약성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보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6,844달러이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10,157달러, 미국은 17,466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미국의 약 1/3에 불과한 수준이며 OECD 평균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교육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개인의 능력

을 개발하여 창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제 1의 목표로 삼는다면, 한국의 현실은 이의 실현과는 거리가 크다 하겠다.

Ⅲ. 국내외 대학의 수입 구조

대학의 수입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은 높은 조세 부담을 진다. 개인과 국가가 대학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사립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하고 국·공립 대학은 정부 보조에 의존한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국·공립 대학은 수입의 79.8%를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 20.2%를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 수입의 68.1%를

<표 4> 대학의 수입 구조

국·공립대(2000년 예산 기준) 단위 : 억원			사립대(1999년 결산 기준) 단위 : 억원			사립대(미국, 1994~1995년) 단위 : 천달러			
재원별	금 액	구성비(%)	재원별	금 액	구성비(%)	재원별	금 액	구성비(%)	
전체 수입	33,751	100	전체 수입	64,577	100	전체 수입	71,605,340	100	
국고 부담	국고 지원	19,600	58.1	등록금	44,007	68.1	등록금	29,598,772	41.3
	기성회비	7,321	21.7	전입금	6,368	9.9	연방정부	10,051,329	14.0
	계	26,921	79.8	기부금	5,888	9.1	주정부	3,285,593	4.6
학생 부담	수업료	1,472	4.4	국고보조금	3,051	4.7	지방정부	409,077	0.6
	기성회비	5,358	15.8	교육부대 수입	1,385	2.2	민간지원, 보조금, 계약금	6,129,220	8.6
	계	6,830	20.2	교육외 수입	3,878	6.0	기부수입	3,294,904	4.6
						판매와 서비스	15,521,899	21.7	
						기타	3,314,546	4.6	

자료 : 김석천(2001), "우리나라 대학 재정 실태와 건설화 전략" 『대학교육』 Vol. 109, p. 60.,

U.S. Department of Education(1997),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Higher Education General Information Survey(HEGIS). "Financial Statistics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surveys ; and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IPEDS), "Finance" surveys.

“

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한 지출 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국에 비견될 만한 수준의 교육비 지출이 되도록

교육비에 대한 우선 순위를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이 법인 전입금 9.9%, 기부금 9.1%, 기타 교육 외 수입 6.0% 등이고 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는 4.7%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 사립대학의 경우는, 등록금이 41.3%로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가 가장 높으나, 다음으로 판매와 서비스 수입이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를 비롯한 정부 보조가 19.2%에 이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국·공립 대학은 그 수입의 대부분을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고, 사립 대학은 그 수입의 대부분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사립대학을 미국의 사립대학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사립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상대적으로 정부로부터의 보조가 미국의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지출 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국에 비견될 만한 수준의 교육비 지출이 되도록 교육비에 대한 우선 순위를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에 투입되는 자원의 비중이 더욱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을 위한 정부 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있어서도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보조를 늘이는 방안을 적

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재정 확충 방안 — 국민은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담을 져야 한다

1. 등록금 인상

우리나라 대학 수입에서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경우 68.1%를 차지하고 국립대학의 경우 20.2%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이다. 각 대학은 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등록금 인상을 꾀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집단적 의사 표시로 말미암아 등록금 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나 학교 법인의 재정 확충을 통해서 필요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등 의식은 대학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 원천은 세수에 의한 것이나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의 최저와 최고의 평균치를 일본, 미국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때, 국·공립 대학의 경우는 미국 공립대학 거주자 등록금보다는 높으며, 일본의 국립대학에 비하면 65% 정도로 낮다. 사립대학 등록금의 경우는 매우 차이가 커 일본의 1/3, 미국 사립대학의 1/5 수준이다. 비록 이들

〈표 5〉 대학 등록금의 국제 비교

	한국(1997, 1학기), 원		미국(1998~1999), \$	일본(1998), 엔
	최 저	최 고		
국립	2,147,000	3,243,000	3,243	744,200
공립				844,943
사립	2,146,000	7,037,000	14,508	1,251,863

자료 :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1999~2000 Almanac Issue, Vol. XLVI, No. 1(1999), p. 4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자료.

자료가 개략적 자료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사립대학 등록금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1998~1999학년도 일본의 와세다 대학의 공대 입학생의 수업료는 ¥964,500, 등록비 ¥19,000~¥290,000, 학교 발전비 ¥90,000, 실험실 사용료 등은 ¥2,000~¥104,500으로 최소한 ¥1,075,000에 달한다. 그밖에 미국의 Columbia 대학은 기숙사를 제외한 등록금과 필요 비용을 합한 액수가 \$24,974이며 Harvard 대학은 \$24,407이었다.

현재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정부가 사립대학의 운영에 대하여 독자적 운영의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에서부터 기타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은 이에 따라 비슷한 조건하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립대학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수입에서 차지하는 정부 보조의 규모는 4.7%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사립대학은 정부 보조를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대학에 자율권을 대폭 늘려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학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분되

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정부 보조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립대학에 보조금을 현재의 상태와 같은 수준에서밖에 지급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 대학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쥐 대학이 등록금 책정을 비롯한 대학 운영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재정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 정부 보조 증대

정부 보조가 대학의 수입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립대학의 경우 79.8%, 사립대학의 경우 4.7%다. 앞서서도 본 바와 같이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 예산의 규모는, 서구 선진국이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4.4%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비중은 더욱 낮아 OECD국가 대부분이 1%를 상회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0.5%에 불과해 이들 국가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현정부 출범 시부터 표방해 온 교육 재정의 GNP 대비 5% 확보라는 방침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려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0년 교육비 예산은 일

3) Aaron Wildavsky(1979),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3rd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p. 4.

〈표 6〉 연도별 정부 예산 대 교육부 예산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교육부 예산 정부 예산(%)	15.2	17.6	18.9	22.3	22.8	20.4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0』, p. 897.

반회계와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를 합하여 19조 1,720억 원으로 GNP 532조 1,556억 원의 3.6%에 불과하다. 2001년 GNP 예상치가 577조 3,888억 원이므로 1%를 상향 조정하였을 경우 약 5조 7천억 원의 재원이 늘어나게 된다. 사실 교육비 예산의 증대는 방법을 몰라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니다. 예산은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여러 이해 관계자의 타협·조정과 같은 정치적 사항의 핵심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³⁾. 이 점에 대해서 정권적 차원의 인식 전환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질 자세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서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싫어한다면 교육에 대한 증대된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 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1995년까지는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부 예산은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교육부 예산이 20% 미만이던 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 20%를 웃돌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24%를 최고로 최근에는 다시 그 비중이 낮아지거나 적어도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997년 말 외환 위기 이후 경제 문제의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둔 결과일 것이다. 이제 다시 교육의 중요성과 제원 확

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직도 과밀 학급과 열악한 교육 환경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육 예산의 지속적 증대가 요청된다.

3. 기부금 증대

1999년 한국 사립대학의 수입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였다. 각 대학은 수입의 확대를 위하여 기부금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는 대학에 대한 기부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1994~1995년 미국 사립대학의 경우는 수입의 13.5%를 민간지원 등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보다 그 비중이 높다.

한국의 경우 대학에 대한 무보상의 기부를 하는 경우가 아주 제한적이며 그것도 소위 유명 대학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학도 기부금이 적다는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제정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을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학에서 기여입학을 위한 방침 발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여입학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회는 무조건 기피하는 자세가 아닌 진지하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여입학에 대한 가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등록금도 올

“

현재와 같이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특별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보조를 대폭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학 운영에 대해 국립대학과는 구분되는 차원에서
 사립대학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

리지 말라. 세금도 더 내지 못하겠다. 기여입학은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엄청나게 필요한 대학의 재정 수요를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대학의 운영과 재정 운용에 대해 폐쇄적 자세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투명한 대학 운영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개된 토론이 요청되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아야 할 것이다.

V. 결론

현재 한국의 대학은 국제적 수준으로의 발전 비전을 세워 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 사립을 막론하고 정부 보조를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교육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 예산에서 교육비 증대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치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적극적 시도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정부가 표방한 GNP 5%의 교육비 예산 확보라는 사항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히 정부 예산에 있어서 대학에 대한 지출의 비중을 늘릴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특별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보조를 대폭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학 운영에 대해 국립대학과는 구분되는 차원에서 사립대학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등록금의 책정에 있어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대학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확대해 주되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경우에도 교육에 대한 요구는 많으면서 부담은 지지 않겠다는 자세는 이제 스스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 인상은 안 된다, 세금도 더 못 내겠다, 기부금도 인정 안 하겠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학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획기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는 국가의 재원 활용에 대한 우선 순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지나친 이기주의에 근거한 왜곡된 평등감에 사로잡혀 대학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국가경쟁력 약화로 돌려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연**

김기연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기도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교수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지원부장으로 파견 근무 중이다.